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 입증 모호… CEO에 책임 물어야

해킹에 뚫린 금융보안

〈下〉 피해 보상과 책임

금융사, 피해액 전액 배상 한다지만
즉각적 금전손실로 이어지지 않아
피싱·명의도용, 2차범죄 악용 우려

CISO-CEO 간 권한·책임 불균형
실효성 있는 책임체계 마련 절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액 전액 배상'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데다 보안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범위도 불분명하다. 금융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책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보상 어려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피해액을 전액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구제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가 밝힌 전액 배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최고경영자(CEO) 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전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반드시 즉각적인 금전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 이후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 79건 가운데 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2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금액 2780만원 중 실제 인정금액은 1190만원으로, 금액 기준 인정률은 약 42.8%에 불과했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피

해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를 거쳐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특정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사고와 금전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약속하더라도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피해 인정 범위와 입증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금전 손실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소비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엇갈린 권한과 책임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최고경영자(CEO) 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업무는 CISO가 총괄하지만, 보안 인력 확충과 대규모 시스템 투자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CISO를 지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CISO는 정보보호 전략 수립과 보안 위험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CISO의 판단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모의해킹이나 자체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적시에 확보되지 않으면 보안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CISO가 위험성을 경영진에게 보고했는지, 경영진은 이를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미렸는지 등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진다. 단순히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CISO에게 책임을 집중하기보다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행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한 CEO 중심의 책임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보호를 개별 부서의 기술적 관리 업무가 아닌 금융회사 전체의 경영위험으로 인식하고, 최고경영진이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수준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사회 차원의 감독 기능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관련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보고된 취약점이 실제 예산 편성과 개선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사회가 보안 위험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이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금융보안 책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ISO에게 부여된 책임에 상응하는 예산·인력 관련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CEO와 이사회가 보안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이후 담당자를 문책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취약점 발견부터 개선 결정, 예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보안 관계자는 "CISO가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더라도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결정권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보안사고의 책임을 실무 담당자에게만 묻기보다 투자와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진까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한화생명, 증권 출자 2500억 '비보험 확장'

4400억 애류온 지분 50.54% 취득
6.5조 규모 저축은행 사업기반 구축
인수 후 유동성관리 무리 없을 것
K-ICS비율 5%p 안팎 하락 전망

한화생명이 계열 증권사 증자와 캐피탈 인수를 병행해 비보험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2500억원 직접 출자는 집행을 마쳤고, 애류온캐피탈 지분 인수에는 4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는 투자에 따른 유동성 관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인수 이후 지급여력 하락과 자본관리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8일 공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한화생명이 전환우선주에 2500억원을,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보통주에 2500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 캐피탈·저축은행 편입 추진

증권 투자는 기존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격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미 한화생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법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자본 확충을 바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기업금융 등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이 취득한 전환우선주에는 보통주 전환권과 액면가 기준 연 6%의 우선배당 조건이 붙었다. 배당가능이익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하지 못한 우선배당액은 이후 회계연도로 이월 누적된다.



한화생명 사옥.

/한화생명

애류온 거래는 외부 금융회사를 편입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인수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애류온캐피탈 보통주 지분 50.54%를 440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센트roids 측 사모펀드(PEF)와 공동으로 인수해 금융당국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애류온캐피탈은 한화생명의 자회사로, 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한 애류온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기업금융·투자금융과 설비 등의 리스·할부를 다루는 물적금융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더해진다.

한화생명은 기존 한화저축은행과 애류온저축은행을 연계해 총자산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중소기업 고객 접점을 넓히고 금융 계열사 간 사업 연계로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연계가 얼마나 이익을 늘릴지는 인

수 이후 실적으로 확인할 부분이다.

◆ 자본 적정성은 과세

한화생명의 올해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90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6.0% 증가했다. 보험 본업 실적도 개선돼 별도 기준 보험손익은 2853억원으로 62.1% 늘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일 평가자료에서 애류온 지분 취득금액 4400억원과 한화투자증권 전환우선주 투자 2500억원을 함께 검토했다. 6월 말 운용자산 103조 4000억원과 현금성자산 1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유동성 관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 적정성은 별도 점검 대상으로 봤다. 한기평이 제시한 한화생명의 6월 말 K-ICS 비율은 168.0%다. 한기평은 인수 완료 시 요구자본이 증가해 이 비율이 5%포인트(p) 안팎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ICS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 규모에 대비한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지표다.

공동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도 향후 자금 소요를 살필 대목이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PEF가 보유하게 될 지분을 한화생명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돼 있어 추가 지분 취득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시에 구체적인 행사 시점과 가격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기평은 "한화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주형기자 gh471@

“정확한 부동산 공시로 정책지원 강화”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 국감 출석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사진)이 15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부동산 공시 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ی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주간에 주택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지만 외부검증 강화와 AI 시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이나 상가 공실통계 등 신규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국감을 통해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해서 집값의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의 흐름 전망을 묻는 질의에 “부동산원은 국가승인 통계인 주간 통계, 월간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집값) 전망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안성미 기자 smahnt@

하나금융, 인천서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JOB매칭 페스타 in 인천’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6 하나 JOB매칭 페스타 in 인천’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 대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렸다. 인천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등 지역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공학·항공·관광·제조·물류·사회서비스 분야의 인천 지역 중소기업 20곳이 참여해 일대일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50여 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 게시대도 운영됐다.

특히 인지기능 매니저와 1인 크리에이터, 데이터라벨러 등 디지털 신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체험관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이력서 작성과 모의면접, 진로성향 진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나유리 기자